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요약 보고서

한국 한부모가족 복지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서론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화라는 이중적인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한 강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6.5%를 차지하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 특히 미혼모 가정은 경제적 불안정, 주거 문제, 고용 불안,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현행 한부모가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원 정책의 현황

1. 현금 지원 제도

현재 국가는 평균 소득의 63% 이하를 버는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 및 의료 지원 제도도 일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는 자녀 양육비와 기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거비와 보육비를 더하면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가구의 최소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복잡한 신청 절차와 소득 검증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주거 지원 정책

공공 임대 주택 배정 시 한부모 가정이 우선권을 갖는다. 또한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임시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정부 임대 주택 수는 50채였다.

대부분의 쉼터는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임시 숙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이 영구적인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임시 주택 시설에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불안정한 임대 주택이다.

3. 고용 및 보육 지원

정부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직업훈련, 공공 보육시설 이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 및 통신요금 감면 등 생활비 경감 정책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부족, 시간제·저임금 일자리 중심의 취업 구조, 공공 보육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의 경우, 안정적인 보육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육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해외 정책 사례와 시사점

미국의 경우,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TANF 제도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 지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직업훈련과 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여 자립을 유도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되지만,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고용 연계 기능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2. SNAP 제도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는 식료품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식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은 제도 자체는 존재하지만, 현금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며 자립 연계 프로그램이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았고 주거·보육 지원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차이가 있다.

해외 사례는 생계 지원과 자립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 개선 방향

1. 현금 지원 확대 및 접근성 개선

-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의 단계적 인상
- 신청 기준 및 절차 간소화
- 자동 연계 시스템 도입을 통한 행정 부담 완화

2. 주거 안정화 정책 강화

- 한부모가족 전용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 쉼터 거주 후 공공임대로 연계되는 프로그램 구축

3. 고용 및 보육 인프라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야간·탄력 보육 서비스 도입
- 직업훈련과 안정적 일자리 매칭 강화

4. 차별 금지 및 인식 개선

- 공공 캠페인을 통한 가족 다양성 인식 개선
- 상담·심리 지원 프로그램 확대

결론

한국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일정 부분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현금 지원 확대, 주거 안정화, 보육 인프라 강화, 고용 연계 시스템 개선, 그리고 사회적 낙인 완화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특정 집단을 위한 복지정책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와 사회 통합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